

 보도자료 2013.9.12.(목)	행사문의	한 지 영 (02-3156-7031)
	언론담당	황 애 리 (02-3156-7296)
	보도일자	2013.9.12.(목)
	※ 총 7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복지국가 주요 요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법과 정책의 정비방향”을 주제로 한일여성국제컨퍼런스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과 한국젠더법학회(회장 김엘림)는 오는 9월 14일(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에서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법과 정책의 정비방향”을 주제로 한일여성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일본의 노동법 및 사회보장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양국의 복지국가 논의에서의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에 대한 입법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성평등한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을 겸해 진행된다.
- 최금숙 원장은 “젠더 관점에서 성평등한 복지국가로 재편되는 것은 향후 여성입법정책의 중요 과제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에 있어 취약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노동법의 재편: 젠더평등을 향하여”를 주제로 발표하는 아사쿠라 무츠코 교수(淺倉むつ子, 와세다대 대학원 법무연구과)는 여성중심 접근(women centered approach)를 토대로 일본 노동법의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일·삶 균형,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등에 관한 최근 일본 노동법 상의 논의를 살펴본다.
- 카미오 마치코 교수(神尾真知子, 니혼대학교 법학부)는 “일본의 파트타임노동의 법정정책과 문제점: 양질(decent)의 파트타임노동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관련 법정정책을 소개하면서 ‘양질의 파트타임노동’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 오사와 마리 교수(大沢眞理,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일본에서의 사회적 취약성의 극복과 생활보장체계”를 주제로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활보장시스템을 비판하고, 사회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주제발표 후에는 노상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형욱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2. 행사 개요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발표 1] 노동법의 재편: 젠더평등을 향하여

아사쿠라 무츠코 교수(淺倉むつ子, 와세다대 대학원 법무연구과)

□ ‘여성중심 접근’(women centered approach)을 통한 노동법의 남성주의 비판

- 노동법이 대상으로 한 ‘노동’은 시장노동으로서 ‘유급노동’을 하는 숙련·풀타임 ‘남성·세대주’임.
 - 가정내 무급노동을 담당하고,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노동법에서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근로자로 규정
 - 여성은 ‘노동하는 신체’와 ‘낳는 신체’의 모순 속에서 2류노동자로 가정.
- 젠더관점에서 노동법 재편을 위해 ‘여성중심 접근’을 통해 근로자 모델 자체를 수정해야 함.
 - 여성의 경험, 즉 노동시장의 노동과 가족내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근로자라는 관점에서 노동법 이론이 수정이 필요함.

□ 젠더관점에 근거한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론

- 일·생활균형에 대한 헌법·노동법 상의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고, 젠더평등을 위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일·생활균형의 법규범적 근거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성평등원칙,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의 원칙과 여타 노동관계법 상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대응결정의 원칙 등이 해당됨.

- 일·생활균형정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노동의 규제’와 ‘개인생활의 자유’,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 돌봄활동의 존중’ 등임.
 - 특히 육아·돌봄 등 가족 내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재생산 활동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

□ 복합차별 등 차별금지법리 구축 등

- 복합차별은 차별사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 차별의 결과가 악화되는 경우로 유럽연합지침이나 영국 등에서는 ‘복합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또는 ‘결합차별’(combined discrimination)로 금지하고 있음.
 - 복합차별을 겪는 여성의 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해 복합차별의 개념과 법리를 검토가 향후 과제임.

[발표 2] 일본의 파트타임노동의 법정책과 문제점: 양질(decent)의 파트타임노동은 가능한가?

카미오 마치코 교수(神尾真知子, 니혼대학교 법학부)

□ 일본의 여성 파트타임노동의 현황

- 일본 여성노동인구는 전체 중 42.0%로, 2011년 현재 여성근로자의 과반수(54.7%)는 비정규근로자임.
- 근로자 중 비정규근로자 비율의 남녀간 격차가 한국(21.3%)보다 일본(34.8%)이 더 크고, 특히 비정규근로자 중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본 파트타임노동의 법정책의 문제점

- 노동법 상 파트타임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만, 기타 노동관계법 상 적용배제됨.
 - 육아·개호휴업법 상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적용배제하고 있어, 증가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육아·개호휴업 사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일정요건 하에 육아·개호휴업을 사용하도록 하였음.
 - 남녀기회균등법 상 파트타임근로자를 이유로 한(고용형태) 차별적 취급은 적용배제됨.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생계부양자인 상시근로자를 모델로 설계되어 파부양자인 배우자(다수 여성)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동됨.
 - 유족연금은 부양받고 있는 남편에게 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건강보험은 비정규고용 근로자를 배제하고 있음.

□ 양질의 파트타임노동의 가능성

-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해 일본 여성의 재취업형태는 대부분 파트타임노동임.
- 이러한 파트타임노동의 남녀비대칭성이 성별역할분업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양질의 파트타임노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발표 3] 일본에서의 사회적 취약성의 극복과 생활보장체계

오사와 마리 교수(大沢眞理,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 일본의 사회적 취약성극복을 위해서는 젠더관점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

- 경제위기, 자연재해, 원전사고 등 일본사회의 불거지는 사회적 취약성을 젠더관점에서 드러내고 분석하여야 함.
- 또한 복지국가 논의에서 정부의 법률,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 가족, 비영리조직 등 민간의 제도와 관행을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생활보장시스템)이 필요함.

□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 비판: 기능대체론과 소득 재분배의 문제

-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체제를 ‘남성생계부양자’형, ‘일·생활균형지원(work-life balance)’형, ‘시장지향’형으로 구분함.
- 그러나 일본은 복지국가의 기능대체론의 대두로 경제성장추진정책, 고용유지 정책 등을 통한 고용안정이 복지국가에서의 재분배 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음.
- 현재 남성생계부양자 형 사회보장체계인 일본은 빈곤율이 높고, 정부의 소득이 전에 의한 빈곤사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동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빈곤율을 높여 빈곤사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비정규고용이 많은 여성이 취업에도 불구하고 빈곤위험이 크고, 빈곤율도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취약성 해결을 위한 감재(減災) 사회

- 사회적 취약성 극복차원에서 젠더, 지역, 연령, 계층, 민족성 등에 의한 사회분열, 격차, 사회적 배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재해에 강한 사회(social resilience to disasters), 즉 “감재(減災)사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적 포섭을 통한 회복력(resilience)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성 평등화가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임.

붙임 2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3년 제3차 젠더와 입법 포럼 & 한일여성국제컨퍼런스]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의 노동과 사회보장: 법과 정책의 정비방향
- 일시·장소 : 2013년 9월 14일(토) 14:00~18: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세미나실(대학로 소재)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젠더법학회

구분	내용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 환영사: 최금숙 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좌 장 : 김엘림 교수(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14:10~14:50	[제1주제] 노동법의 재편: 젠더평등을 향하여 · 발표: 아사쿠라 무츠코 교수(淺倉むつ子, 와세다대 대학원 법무연구과)
14:55~15:35	[제2주제] 일본의 파트타임노동의 법정책과 문제점 - 양절(decent)의 파트타임노동은 가능한가? · 발표: 카미오 마치코 교수(神尾真知子, 니혼대학교 법학부)
15:35~15:45	휴식 및 다과회
15:45~16:25	[제3주제] 일본에서의 사회적 취약성의 극복과 생활보장체계 · 발표: 오사와 마리 교수(大沢眞理,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25~17:40	지정토론(가나다순) 노상현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영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경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장지연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형욱 박사(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17:40~18:30	○ 청중과의 토론
	○ 폐회
※ 한·일 순차통역 예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